

농어업 선진화 정책추진 배경설명

농어업선진화위원회



1. 과제 선정 기준 및 추진 절차

- 「농어업선진화 위원회」에서 10년 후를 대비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
 - 비용절감 등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는 과제부터 큰 틀의 정책 과제까지 다양한 차원의 과제를 발굴
 -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제 성격에 따라 단순 보고과제, 논의과제, 현장과제로 분류
- 분과위원회에서 과제 채택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
 - 주요 과제 선정 이후에도 기존 과제 수정 및

신규과제 추가 가능

- 결정된 개별 과제는 T/F에서 초안을 작성, 분과위원회·기획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 상정

■ 다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T/F에서 다음의 후보 과제群을 마련

- ① 장기 미해결 숙원과제(농어업인 단체 협의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 ② 농어업인의 기쁨을 시원하게 하는 과제(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
- ③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보조금 개편, R&D 체계 개편 등)
- ④ 미래성장 준비과제(녹색성장, 한식세계화 등)
- ⑤ 기타(검역 관련조직 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 매월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표

※ 4월(잠정, 4.28)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해 분과별로 1~2건 선정

2. 분과위원회별 후보과제(안)

가. 미래성장동력

① 농업·농촌의 「格」과 「魅力」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선정이유 : 197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만만년 역사를 지닌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格」과 「魅力」이 추락, 미래세대의 농업·농촌 소양(Agricultural Literacy)마저도 실종될 우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히 농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일반의 농업·농촌 소양이 우리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

- UR 이후 시장개방의 여파로 인해 우리 농정의 역량을 경쟁력강화,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등 ①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인문, 지리, 문화, 예술, 교육 등 ② 컨텐츠와 「소프트파워」정책도 확대해 나갈 필요

※ 소프트파워란 경제력 등 물리적 힘이 아닌 지식, 감성, 창의, 문화 등 매력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동의와 공감을 유발하는 힘을 말함

- 사회일반은 이미 자본·인력 투입형에서 스토리텔링·지식기반형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감안, 「소프트파워」강화가 궁극적으로 중장기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 주요쟁점 : ① 농업·농촌 가치 재조명(reframe)과 소프트파워 강화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 여부와 수준, ② 농식품부의 정책화 역량, ③ 정책방향, 정책 영역과 추진체계, ④ 재원, ⑤ 정책마케팅과 소통

※ 예컨대, 지식집대성 현대판 「농업·농촌·식문화」태리지「프로젝트 추진

② 농어업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현재의 R&D 추진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R&D를 추진해야 하는가?

○ 선정이유 : 농어업 분야 R&D 추진체계가 분절화·중층화 되어 있으므로,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

※ 농수산식품 관련 연구기관은 중앙·광역·기초 3계층별로 7개 기관(연구인력 2,665명)이 있으나, 조정·협력 시스템 미확립 및 연구 성과 활용이 미흡

- R&D 추진방향 및 투자 규모 등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

※ 농림수산업 분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4.4%(2007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 주요쟁점 : ① R&D 추진체계의 혼선을 없애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② 사용자 지향적 R&D 추진방안 ③ 사용자 수익 부담원칙 도입 검토

③ GMO 작물 생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 선정이유 : GMO 작물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GMO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글로벌 공급부족 상황 하에서 향후 GMO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GMO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GMO 작물 재배면적(세계) : (1996) 170만ha ⇒ (2002) 5,870만ha ⇒ (2007) 11,430만ha

※ 주요국별 면적 : 미국 5,570만ha, 아르헨티나 1,910만ha, 브라질 1,500만ha, 캐나다 700만ha, 중국 380만ha 등

※ 작물별 재배현황 : 콩 5,860만ha, 옥수수 3,520만ha, 면화 1,500만ha, 유채 550만ha

- 주요쟁점 : ① GMO 작물의 안전성·재배확대 등에 대한 소비자·환경 단체 등과의 공감대 형성, ② GMO 작물 재배를 허용할 경우,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 및 향후 추진 방향, ③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추세에 대한 대응 방향
- ※ 재배·생산기술, 환경제어기술,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 등의 정립 필요

④ 학교급식 등 지역 중심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품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local food / food mileage)

- 선정이유 : 학교급식 시장은 약 2조원 이상의 규모이나,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 급식에 산 등으로 국내산 소비가 제한
 -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인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도모할 필요
 - ※ 2007년 학교급식예산(4.2조원) 중 식품비로 지출된 금액은 2.6조원
 - ※ 부담주체별 경비 분담비중(2007) : 학부모(71.7%), 교육청(24.2%), 지자체(3.5%), 기타(0.6%)
- 주요쟁점 : ① 급식 시스템에 참여할 주체(농협 등)와 역할, ②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단가 인상분 부담 방안, ③ 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성 평가(비용 절감 효과 등)

⑤ 전통주를 어떻게 세계화 할 것인가?

- 선정이유 : 전통주는 국내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동시에 전통문화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분야
 - 현행 세무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산

업성장 정책 추진에 한계

- 세계적인 술 다소비 국가임에도 전통주 산업 비중이 미미

※ 국내 주류시장(약 21조원 추정) 중 전통주 점유율은 0.8% 수준

- 주요쟁점 : ① 전통주 산업 육성 관련 정부내 기능의 조정 방향, ② 전통주산업육성법 제정 방향, ③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 방안 ④ 농산물 소비와 연계방안
- ※ 주세 업무는 국제정에서 지속 담당하되, 주류연구소 등의 육성기능 이관
- ※ 전통주 통신판매 대상 확대(현행 우체국 ⇒ 농협 등)

나.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

① 농어업관련 직불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 논의배경 : 직불제가 품목별·계기별로 복잡다기하게 운영 ⇒ 직불제간 상충, 집행관리 등에 부작용 발생 지적
 - 쌀 직불제로 인해 경영이양직불제 실효성(규모화 등) 저하
 - 과다한 행정비용, 집행관리 비효율성, 체계적 모니터링 곤란
 - ⇒ 운영 효율화와 부작용 완화를 위해 통합 방안 검토 필요
 - 예) 소득안정관련 직불제와 국토관리형 직불제로 통합 등
- 주요쟁점 : 소득안정, 국토관리형 직불제로 통합시, 각 직불제의 포함 범위
 - 예) 소득안정 직불제 : 현행 쌀 변동직불, FTA 직불, 경영이양직불제

② 농가단위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시 바람직한 대안은?

- 논의배경 : 시장개방 확대, 규모화 진전 등으로

※ 참고, 직불제 및 직불성 사업 현황

목적 \ 분야	논	밭	축산
소득안정	쌀 고정직불제 (2001, 2005) 쌀 변동직불제 (2002, 2005)	FTA피해보전직불제 (시설포도, 키위, 2004)	송아지생산안정사업(2001)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01)		축산공제로 지원(1997)
구조개선 촉진	경영이양직불제(1997)	과원 폐업 지원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2004)	
공익적 기능 제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1999) 경관보전 직불제 (200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2004)		
농어민 복지 관련 직불제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2004),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1995),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1996),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2004), 사농노가 인력지원(2006)		
수산물 관련 직불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2008),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1978), FTA피해보전직불(2008), FTA폐업지원(2008)		

심화되고 있는 농가소득 및 경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약

-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2007.6)의 일환
으로 도입키로 방침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 필요

※ 기본개념 : 특정년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일
정수준 이상 하락 시 하락액의 일부를 보전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실효성 있게 작
동하기 위해서는 ① 농가의 '소득' 파악이 전
제되어야 하고 ② '주업농' 중심으로 지원 대
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쟁점 : ① 소득파악방법 : ㉠ 농가실제소득
(신고), ㉡ 매출액(신고), ㉢ 평균소득(추정) ②
주업농의 기준, ③ delivery system

다. 경쟁력 강화

1 농어업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 논의배경 : 보조금은 지원 초기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는 등 점
차 부작용이 확대
- 농어업인이 면밀한 사업성 검토없이 보조금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왜곡과 과도한
투자로 경쟁력 약화 초래

○ 주요쟁점 :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

- ① 보조금 사업 분석·평가 및 개편 방향에 대
한 합의
- ② 보조금 축소, 현상 유지 및 확대 분야에 대
한 합의
- ③ 보조금의 지원효과를 평가, 차등화 하여 지
원하는 방안
- ④ 보조금 집행 및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주요 보조금 사업별 예시>

-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2009예산 1,508억원)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
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오염, 지
력감퇴 등 자연의 순환·균형을 파괴
- 축산분뇨 처리시설(2009예산 754억원)
-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전문가 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신기
술 개발업체 등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2009예산 641억원)

- 영세한 한우 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외부 인력과 자본이 어떻게 농업분야에 원활히 유입 되도록 할 것인가?

- 논의배경 : 외부 인력과 자본 진입이 어려운 폐쇄적인 산업구조로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한계
 -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분적으로 존재
 - 주요쟁점 :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외부 인력·자본이 농어업 분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농어업계의 공감대 형성 필요
 - 농림사업시행지침상 농업인·법인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상법상 회사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
 -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기존 저리(3%) 창업자금 지원제도 철폐 및 대안 강구
- ※ 농식품 투자 로드쇼 개최(4.29, COEX)

③ 담보 중심의 농어업 금융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

- 논의배경 : 현행 농어업 금융은 담보(농신보 포함) 대출 위주로 공급됨으로써 선도형 경영체가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유리은실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종전의 보수적·소규모 자금 지원체계로는 대응 곤란
- 주요쟁점 :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영체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
 -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되도록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을 민간참여형 직

접투자 방식으로 전환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방식 도입
- 성장주도형 경영체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관리 전문회사 설립

④ 경자유전원칙과 농지임대차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 논의배경 : 경자유전원칙과 농지임대차 제한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 임차농지 비중이 전체 농지의 43%를 차지
 - 임차농지 증가현실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문제, 농지관리의 비효율 등 발생
- ※ 현행 농지법상 서면계약원칙,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의 지위승계,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 일부만 제도화되어 있음
- 주요쟁점 : 농지임대차를 제도화할 경우 농지소유자의 반발, 임차농지 축소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활성화 병행 필요
 - 임대차 제도화 방안 :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료 상한, 계약해지 제한 등

⑤ 농지은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논의배경 : 농업생산성 제고, 농지 수급 안정, 영농 규모화 확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농지은행 활성화 필요
 - 현재 위탁 대상농지와 임차 대상자 제한, 매입·비축사업 미실시 등
- 주요쟁점 :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대상농지를 확대하고,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대상자 확대 등 검토
 - ① 녹지·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허용
 - ② 영농하고자 하는 일반법인(식품업계 등)에

제도 농지 임대허용

- ③ 간척농지 인수, 이·탈농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인·기업농 등에게 장기임차
- ④ 기타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 검토(양도소득세·수수료 인하 등)

라. 품목 선진화

① 품목별 대표조직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 논의배경 : 경쟁력 있는 품목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 수출까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표조직 필요성 대두
 - 그러나 품목별로 구심점이 없고, 관련된 기존조직(농협, 협회 등)과의 갈등으로 대표조직 설립에 애로
 - 품목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접근 방식도 미흡
- 주요쟁점 : 품목별 대표조직의 필요성 및 육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필요
 - ① 대표조직 육성 필요성에 대한 합의
 - ② 품목별 특성을 살린 대표조직 육성방안과 추진일정
 - ③ 대표조직 활성화를 위한 권한 부여정도(예 : 자조금 관리, 사업추천권 등)

② 농산물 브랜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논의배경 : 개별 유통조직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소비자의 인지도·충성도를 갖추지 못한 브랜드가 난립
 - 소비자 유통업체(백화점·할인점)의 자체 브랜드(PB : Private Brand) 비중 확대에 따른 산지 브랜드 위축 우려
 - ※ 2006년 말 농축산물 브랜드는 총 6552개, 지자체 또는 공동생산자조직의 공동브랜드는 1437개 (21.9%) 정도

- 주요쟁점 : 생산자의 수취가격 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를 위한 브랜드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
 - 난립된 브랜드를 어떻게 통합하고 내실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합의 도출

③ 자조금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논의배경 : 그동안 자조금 품목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다수 품목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조금 단체 결성
 - 생산자 참여 미흡, 일부 품목은 지역농협에서 자조금 대납
 - ※ 농협중앙회에서 12개 품목의 자조금 운영·관리
 - 임의조성 방식의 영세한 규모로 소비홍보 위주 사업집행 추진, 무임승차 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
- 주요쟁점 : 품목별 대표조직의 운영 활성화, 무임 승차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논의 필요
 - ① 원예분야 의무 자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
 - ② 생산자 참여 유도방안, 자조금 활용 효율화 방안, 단체 역량 강화 방안 등

④ 공영도매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논의배경 :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이 새로운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중앙도매 시장(11개소) 및 품목·거점시장(2~3개소)을 제외한 지방도매시장의 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기능 전환 필요성 제기
 - 소매업체 및 생산자의 규모화, 전문화가 진전되는 추세이어서 기존 경매장식 이외에 안정적이고 대량의 거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 요구
- 주요쟁점 : 대형유통업체 비중 증가 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기능·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논의 필요

- ① 지방 도매시장의 기능전환 필요성
- ② 경매 외 거래제도 도입, 시장별 remodeling 방안 등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화, 기능 활성화 방안 등

5 돼지열병(콜레라) 청정화 방안은 무엇인가?

- 논의배경 :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1999년부터 100% 예방접종 실시, 2001.12.1 예방접종 전면 중단 및 청정화 선언
 - 청정화 이후, 철원·강화·김포 및 이천 (2002.4~12) 발생에 이어 6개도, 65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2003.3)
 - ※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중국, 몽골 등 해외에서 유입 판단
- 주요쟁점 : 국산 돼지고기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특히 일본)확대를 위한 돼지열병 청정화 방안 논의 필요
 - ① 돼지열병 청정화 방안, 돼지소모성질환 최소화 및 축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 ② 돼지열병 청정화 방안의 이행에 대한 정부와 농가간의 합의
 - ※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경우 1년 이내 3억 불 이상 수출 가능 전망

마. 거버넌스 선진화

1 정부·언론 등과 농어업인 간의 조정자 역할 및 정책 수립·집행의 파트너 기능을 하는 농·정 협의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논의배경 : 농어업계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정책 수요자와 정책 내용·집행과정을 공유·조정(協治: governance) 할 기구 부재
 - 사안별로 개별 단체와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보조금 개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 곤란

○ 주요쟁점 : 목적과 활동방식이 다른 농어업인 단체들을 모아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체로 구성하는 방법

- ① 농어업인단체를 포함할 것인지, 대표단체만 참여시킬 것인지
- ② 단계적으로 설립(느슨한 협의기구 ⇒ 공식화 ⇒ 자체사업 실시 등)할 것인지, 처음부터 최종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 ③ 협의체의 역할 정립 및 소요재원 확보
- ④ 농협, 농특위 등 기존 협의기구와의 관계 정립

2 농림사업의 집행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논의배경 : 다양한 사업을 종합 집행하는 지자체는 현장 행정력, 집행 자율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하여 수립된 정책이 현장까지 효과적으로 전달·시행되지 못함
 - 중앙정부도 정책개발·기획보다 사업 집행·관리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
 - ※ 지자체를 통한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의 56%를 차지(사업비 기준)
 - ※ 사업 수 : (2007) 190개 ⇒ (2008) 288개(수신분야 94개 포함) ⇒ (2009) 299개(수산 99개)
 - 농가단위직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에 까지 미치는 높은 수준의 현장 행정력 필요
- 주요쟁점 : 현장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인력·기능을 보강할 것인지, 별도의 사업 집행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인지
 - ① 지자체 기능을 강화할 경우 그 방법
 - ② 별도의 사업집행기구를 만들 경우 설립형태, 기능 및 방법
 - 설립형태 : 특별지방행정기관* vs. 정책목적 법인(공사·공단 등)

- ※ 영국의 DEFRA 산하 직접지불청(RPA), 일본의 농림수산성 산하 지방농정국 등
- 지방비 포함 사업, 산하기관(농협·농유공 등) 위탁사업 등 기존 사업의 집행주체 변경 여부 및 범위
- 농진청, 농관원 등의 지방조직의 사업조정 및 신설 집행기구와의 관계 정립

③ 품목별로 구분된 검역·검사 조직의 통합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방법은?

- 논의배경 : 농수산물 검사·검역 관련조직이 품목별로 설립, 관리기능 중복, 사건발생시 자원 집중 애로 등의 문제점 제기
- 현재 농수산물 검역·검사는 품목(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기능(국경검역·국내방역·식품안전)별로 별도기관에서 담당
-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 4개 검역·검사조직을 기능적으로 재조정, 국경(농장)에서 가정까지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논의 진행 중
- 주요쟁점 : 품목별 전문성을 살리면서 생산(수입)·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조직형태 결정
- 4개 검역·검사조직의 통폐합의 필요성 및 통폐합시 문제점
- 통폐합이 필요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 ※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지속여부'의 포함 및 담당자 지정 검토

바. 수산선진화반

① 수산보조금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은 DDA 등 국제규범에 취약하고, 어업경쟁력 제고효과도 높지 않

며, 어업인의 자생력 저하

- DDA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1조 7천억원 중 최대 72% 금지 예상(2007. 11월, 규범 의장 초안 기준)
- 친환경어구·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투자가 전체의 3.8%에 불과
- 보조금 지급을 자원관리와 연계할 경우 가장 강력한 어업관리수단이 될 수 있으나 어업인 반발을 우려하여 시행치 못함
- DDA에 대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보조금 개편 필요
- 주요 검토사항
 - 축소/폐지 대상 보조금 선별
 - 보조금 개편을 TAC(총허용 어획량) 등 자원관리와 연계하는 방안
 - 면세유, 영여자금 등 어업운영비보조 개편

② 어업조정제도가 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 현행 어업조정제도는 법적 강제력 부재로 실효성이 적고 각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현행 조정제도는 법령 제개정 등 심의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어업분쟁 조정기능은 미미
-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필요
- 주요 검토사항
 - 현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보완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동서남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신설

③ 外해양식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 양식산업 웰빙화를 위해서는 밀집된 연안에서 벗어나 먼 바다에서 참치 등 고가어종을 양식

하는 외해양식 활성화 필요

- 연안 양식장 밀식으로 인한 어장오염 및 질병발생 등이 심각하고,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

○ 현행 제도로는 외해양식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외해양식 시설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주요 검토사항

- 외해양식의 본 사업에 적합한 입법 기본방안
- 외해 양식의 개념, 양식방법, 시설기준, 규모화 등 규정
- 내만 가두리 구조조정과 연계한 외해 이설 방안

4 연근해 고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등 일부 포경은 허용되

나, 우리나라는 포경을 전면 금지

- 이에 따라 경북, 울산 등 전통적으로 고래 고기를 즐겨온 지역에서는 고래 고기 공급을 위해 불법포경, 밀수입 등이 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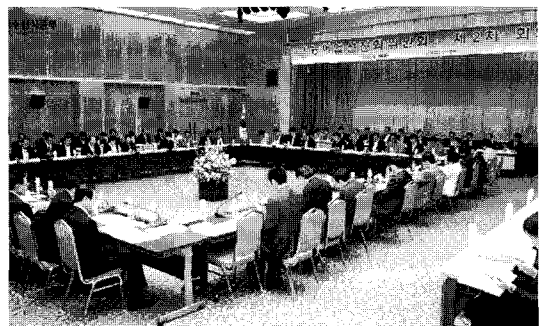
○ 향후 IWC의 상업포경 재개에 대비하고, 연근해 고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검토사항

-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 및 이행지침 보완·정비방안
- 포경재개에 필요한 고래자원 연구기반 조성 방안
- 고래구경(Whale Watching)의 관광 산업화 타당성 검토
- 고래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



▲ 제1차 본회의



▲ 제2차 본회의



▲ 제3차 본회의



▲ 제4차 경쟁력강화 분과위원회